

힘받는 '中 전역 입국금지 확대' 주장

청와대 청원 76만명...“감염원 입구 열고 방역대책”

“불필요·대중관계 우려”...정부 “현입국절차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도 잇따르면서 코로나 19 발원지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 국한된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2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밤사이 코로나19 사망자가 1명 추가되면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의 사망자 수는 7명으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 0시부터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정부는 입국 금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지난 20일 간 입국 금지 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에서 대거 확산되고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청와대 온라인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참여자는 지난 22일 76만

명을 돌파해 마감됐다. 야권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감염원 입국이라는 입구를 열어놓고 방역 대책을 해봐야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서 “누차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조치를 말한 바 있는데 더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6차례 권고했다. 갑대하 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역 사회 감염국면으로 넘어가서 의미 없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환자 발생하고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감염 차단은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초반에는 감기처럼 감염시키고 후반이 되면 하부기도로 들어와서 메르스처럼 내부 감염시킨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24일 오전 이마트 경산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건 감염원 차단이다. 지금 늦었지만 중국과 동남아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유학생은 증상없이 더 많이 전파시킬 수 있다. 20대는 활동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2주 가지고 안되고 4주 이상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중국 전역으로의 입국 금지 확대가 방역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지만 경제적, 외교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관계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쩍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은 “입국제한 이전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때

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인 코로나 사태 이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의 중대한 위협요인 중 하나로 떠오른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과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을 변동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경립 부분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묻는 질문에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유지한다”며 “추가적인 입국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입국에 대한 절차를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이번주 고비’ 中유학생 1만명 돌아온다...‘집중관리’ 성공할까

대학은 공간 부족 호소...지자체 마련 공간 353명뿐



생은 7만979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국내에 있는 유학생은 3만 2591명이다. 1만2753명은 이번 겨울에 계속 한국에 있었고 1만 9838명은 지난 18일 이전에 중국에서 입국했다

이번주 중국 유학생 1만여명이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커지며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학에 다니는 중국 국적 유학

생은 7만979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국내에 있는 유학생은 3만 2591명이다. 1만2753명은 이번 겨울에 계속 한국에 있었고 1만 9838명은 지난 18일 이전에 중국에서 입국했다

나머지 중국에서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은 3만 8388명으로 교육부는 이번 주에 1만여명이 입국하고 다음 주에 900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1만 9000여명은 아직 입국 예정일을 잡지 못했다. 이번주가 사실상 중국 유학생 입국의 ‘피크’가 되는 셈

이다. 교육부는 이에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국 체류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거나 원격수업 인정 학점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시름이 크다. 중국 입국 유학생의 2주간 등교금지 조치를 위해 기숙사 공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인 1실로 공간을 마련해야 할 뿐더러 감염을 우려한 한국 학생들의 반발도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임시 거주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총 35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만 확보돼 있다.

보건 인력도 문제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전국 17개 대학 중 캠퍼스의료 전담 기관에 의사가 상주하는 곳은 4곳(23.5%)에 불과했다.

유엔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미입국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수강 학점 제한을 완화해주는 등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 1학기 휴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A 대학 관계자는 “생색은 교육부가 내고 처리는 대학가에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휴학 유도는 결국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해 이번주 대학가는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신 ●

지속된 층간소음 격분...이웃에 주먹휘두른 3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소음 문제로 이웃을 찾아가 항의하던 중 B씨(27)의 어깨와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가 동거녀와 다투자 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웃에 항의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이들의 다툼이 격해지자 다시 집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투는 소리와 여자의 고성어 끊이지 않자 다시 이웃을 찾아가 안경을 벌이다 결국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평소에도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교 난간 들이받은 택사...차량 피하러다 ‘아찔’

23일 오후 7시10분쯤 광주 동구 호남동 중앙대교에서 A씨(53)가 몰던 택사가 대교 난간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에는 A씨와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으며,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난간을 부순 뒤 다리 위에 멈춰있으며, 다행히 다리 아래로 지나다니는 시민이 없어 큰 사고는 면했다.

A씨는 교각 진입 전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차선인 2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러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재미삼아”...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고교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총 5일간 SNS상에 코로나19관련 가짜 뉴스를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중국을 경유한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증상을 보여 전남 모 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렸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재미 삼아 올렸다”며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해줘 계속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가짜뉴스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74조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허위글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은 A군 외에도 총 5건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A군을 포함해 총 2건 3명에 대해서는 입건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양계장 화재 담 11만마리 폐사 2억3000만원 피해

24일 낮 12시11분께 전북 고창군 아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담 11만여마리가 폐사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양계장 6개동 3998㎡가 모두 타고, 담 11만여마리가 폐사해 소방서추산 2억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